

## <토론문>

: 「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」에 대한 토론 요지

이창재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
- 「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」 논문은 지방·도시 차원에서의 경제협력/경제통합, 특히 환황해권 경제협력을 포괄적이며 심도있게 다룬 수준 높은 논문임.
- 환황해경제권 협력논의는 환동해경제권 협력논의와 함께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음.
  - 당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으나 아직 중앙정부 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도시·지방간 협력이 모색되었던 것임.
- 본 논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환황해, 환동해 및 동북아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.
  - 환황해권 혹은 환동해권 지역의 범위가 다소 차이
  - 추진주체간의 경쟁
- 이러한 지역경제권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: 논문(p.22)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“지방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지만,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산관학연간 연계가 미흡”하였음.
- 지역경제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
  - 중앙정부 및 민간(업계)와의 역할 분담
    - 초기(1990년대)와 달리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크게 진전 (한·중 FTA 서명, 한·중·일 FTA 협상 추진 중 업계차원에서 교역, 투자 활발)

#### □ 지자체 차원에서의 주된 협력형태

- 경제교류(trade fair, 경제시찰단, 관광), 생산네트워크(?)
- 인적교류(청소년 교류, 교육), 문화교류
- 환경, 해양자원 공동관리, 운송·물류 인프라 구축(중앙정부와의 협조)

#### □ 충청남도 입장에서 환황해권 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

- 중국과의 비대칭성: 중국의 성장거점 지역 중 일부는 우리나라 전체보다도 큰 경제규모
  - 징진지 지역(베이징, 톈진, 허베이성 3개지역 포함)
- 해운항로: 카페리 운송도(평택 및 군산과 산동반도)
- 담론 vs. 제도화 vs. 실질적인 협력
- 한·중·일 vs. 한·중
  - 충청남도의 자매결연지역: 중국의 허베이성, 일본의 구마모토현
- 새만금개발의 활용

#### □ 제언

-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다양한 협력에 대한 평가
- 선택과 집중
- 실질적 협력에 주력
  - 비슷한 위상의 지자체와의 협력 타당
- 한·중 협력 우선 => 한·중·일 협력
- 충청남도 민간(업계)의 필요성 파악 및 지원